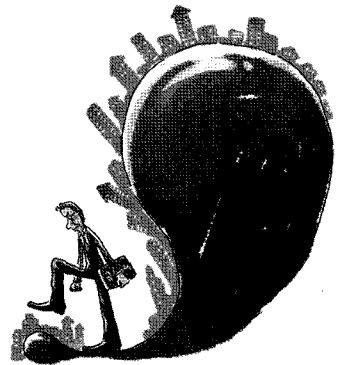


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, 대폭 완화한다.

지식경제부, 「기술규제 개선 방안」 발표

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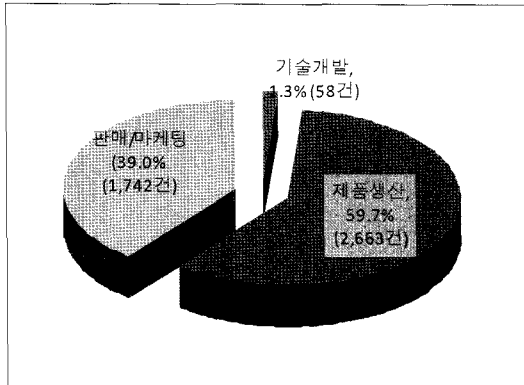
- 지식경제부는 총 18개 부처 소관 94개 법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를 발굴하였음
 - ※ 기술개발 → 제품생산 → 판매 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경영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 관련 규제
- 동 법률 전수조사와 함께 기업 설문조사(480개) 및 기업 CTO 인터뷰(19명)도 병행하여 기술규제가 실제로 기업경영에 얼마만큼 체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음



법령 조사결과

- 법령 조사결과 약 4,000건(법1,643건, 시행령 982건, 시행규칙 1,838건)에 이르는 기술 규제적 조항*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
 - ※ 기술 관련 제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실제 기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는 조항
- 「기술개발-제품생산-판매·마케팅」의 기업활동 단계별로는 '제품생산' 단계의 기술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,

〈기업활동 단계별 규제분포〉



구분	법률	시행령	시행규칙	계
기술	24	20	14	58
개발	(1.5)	(2.0)	(0.8)	(1.3)
제품	1,003	616	1,044	2,663
생산	(61.0)	(62.7)	(56.8)	(59.7)
판매·	616	346	780	1,742
마케팅	(37.5)	(35.2)	(42.4)	(39.0)
계(법령별)	1,643	982	1,838	4,463

- 기술규제 유형별로는 '제조·품목 허가', '창업규제', '인증'의 3개 유형이 관련 조항의 75.0%를 차지하였다.
- 특히, '제조·품목 허가', '창업규제' 등은 진입규제와 사전규제적 성격이 강하여 기업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〈기술규제 유형별 법령 현황〉

규제 내용	연구소 설립	임상실험 규제	기술도입 규제	입지 규제	창업 규제	기술 금융	제조/품목허가	자격 규제	가격 규제	인증 규제	시험, 분석	공공구매 제도	수입, 수출
법률	16	5	3	24	327	22	630	104	28	243	126	17	98
시행령	18	1	1	18	224	15	359	67	13	136	65	23	42
시행규칙	11	1	2	15	356	4	669	98	22	405	161	9	85
계	45	7	6	57	907	41	1,658	269	63	784	352	49	225

기술규제의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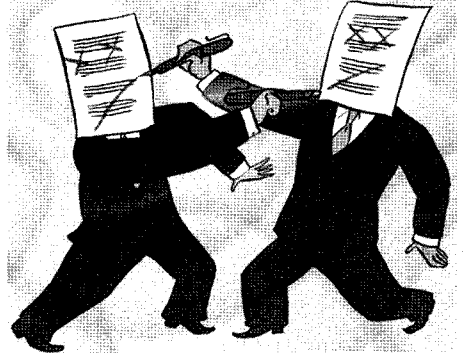
■ 첫째, 숨은 기술 규제 및 재량권 과다

- 기업들은 중앙정부,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의 규제를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

※ 설문조사 결과, 480개 기업 중 33.4%가 경험 (과학기술정책연구원, '09.8)

■ 둘째, 기술개발 의욕 및 기업가 정신 저해

- 소관기관 중첩 및 중복적 절차로 인한 기술개발 의욕 저하
- 기업규모가 큰 대기업 일수록 기술규제에 대한 체감 강도가 높음
 - ※ 기업별 기술규제 체감 강도 : 대기업(3.47), 중기업(2.97), 소기업(3.07%)



■ 셋째, 특수성 반영 및 환경변화 대응 미흡

- 기업,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저해
 - ※ 국가 전략적 지원 산업(녹색산업, 지식기반서비스 등)분야, 고위험 분야 등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
- 급속한 기술변화와 글로벌 환경변화에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신설규제 지체
 - ※ (예시) 나노제품 개발건수(114건)가 미국(426건)에 이어 세계 2위이나(Nanotechnology Oversight, 2008),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검증체계 부재

■ 넷째, 높은 진입장벽 및 시장 고착화 초래

- 지속적인 창업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, 창업절차, 기간, 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미흡
 - ※ 기업환경평가 창업부분 순위 : 110위('07) → 126위('08) → 53위('09)

〈창업비용 및 절차비교〉

구분	창업절차	창업기간	인당 GDP대비 창업비용
한국	8단계	14일	14.7%
OECD평균	5.7단계	13일	4.7%

※ 자료: 세계은행 "Doing Business in 2010" (전체 181개국)

- 기술 기준 등의 고착화로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진입 곤란
 - ※ (예시) 엘리베이터형 무동력 피난기구에 대한 소방법령상 규정 부재로 제품화 지연(법령 개정중)

■ 다섯째, 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경쟁력 저하

- 설문 조사결과 대기업은 평균 246억원, 중견기업은 평균 19억원을 순응비용*으로 지출
 - ※ 순응비용 : 기술제도 관련 행정절차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인력, 시간, 경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

기술규제 대응방안

- 첫째, 숨은 규제 추가 발굴 및 기술규제 DB화
 - 既조사 규제 및 미등록 법적규제 중 기술규제를 DB화 하겠음
 - 비법규적 하위 규정, 공기업/공공기관의 기술규제 발굴
 - ※ 훈령, 예규, 고시, 공고 등의 하위규정 및 지자체 조례, 공기업의 내부 기준·규정·지침·약관 등 하위규정
 - '부처별', '성격별' 등 분류체계 항목에 '기술규제' 부문을 신설하여 DB 구축

- 둘째, 유사 중복 기술규제 통폐합 및 특수성 반영
 - DB화된 기술규제 세부 분류 후 유사 규제는 통폐합을 추진
 - 까다로운 구비서류 등으로 중복·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
 - 기업규모, 업종 등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규제 제도를 운영
 - 녹색성장 산업,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정과제 분야는 기술개발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우대
 - 대, 중견, 중소기업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의 발굴 및 운영

- 셋째, 기술규제 청사진 마련
 - 기술규제의 체계적·단계적 개선을 위한 단·중장기 계획 제시
 - 정부 기술로드맵과 연계하여, 기술발전속도와 규제간의 괴리현상 조정
 - 나노 등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

- 넷째, 기술규제 신설 기준 제시
 - 기술규제에 대한 신설 기준을 제시
 - 신설 기술규제 유효연한을 명시하는 '기술규제 일몰제' 추진
 - 각 기술규제 조항은 연단위로 유효기간을 부여하여, 기한 이후는 효력 정지

- 다섯째, 기타 대응 방안
 - 기술규제 접수창구 다원화를 위해 기술 관련 종사자들이 자주 찾는 R&D 전담기관, 주요 주관기관 등에 애로 접수창구 설치
 - '기술규제매뉴얼' 작성을 통해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여, 기술규제 신설 절차 제시
 - '기술규제백서' 발간을 통해 신설 기술규제 정보 및 전체적인 기술규제 현황, 개선사항, 절차 등 제시